

■ 행심2019-113호

○ 사건명 : 농지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9.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농지원상회복명령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 이 유

I.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농지 □□시 △△면 ☆☆리 ○○○-○○번지 중 1,653㎡가 폐기물 적치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2019. ○. ○.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19. ○. ○.까지 농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II.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농지법 위반에 따른 농지 원상회복명령의 주소는 △△면 ☆☆리 ○○-○○인데, 이는 축사 건축물이므로 부당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똑같은 청구인의 사용토지 전체를 2개 번지로 분할하여 신고처리 한 것은 법규위반이므로 불복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농지원상회복명령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III.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한데, △△면 ☆☆리 ○○○-○○는 전체면적 3,633㎡중 1,980㎡가 기타시설로 전용되어 잔여면적 1,653㎡는 농지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적치장소로 불법 전용되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분을 받았지만 별개로 농지법 제42조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IV.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농지법 제34조, 제42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농지 □□시 △△면 ☆☆리 ○○○-○○번지 중 1,653㎡가 폐기물 적치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이후 피청구인은 2019. ○. ○○.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19. ○. ○○.까지 농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그 각호에서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그 각호에서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등 참조)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에 청구인에게 청문 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확인서도 받지 않았

음),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도 해당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적 하자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